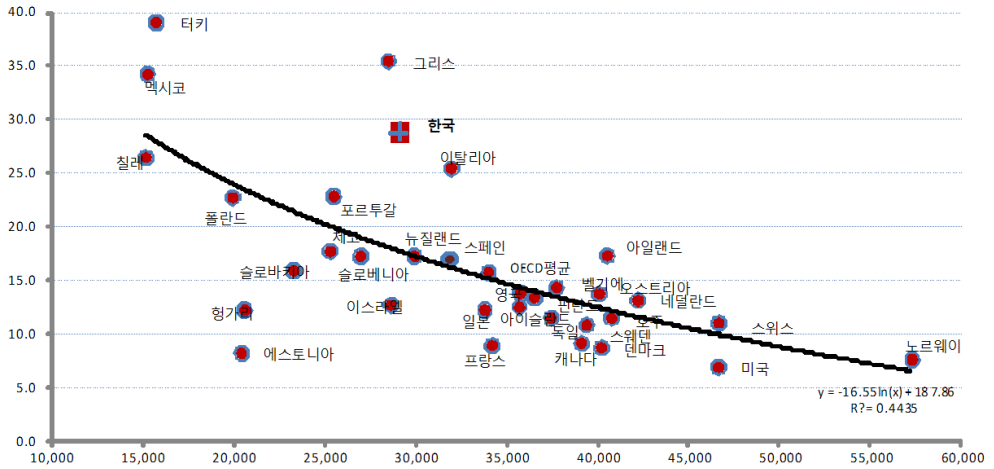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금 재 호*

Ⅰ. 머리말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OECD 국가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의 비중이 감소하는데, [그림 1]과 같이 한국은 추세선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 한국에서 자영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고도의 압축성장의 결과이다. 즉 매우 빠른 속도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비농림어업 부문의 자영업 취업기

〔그림 1〕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구매력 기준)와 자영업 비중(2010년)



주 : 자영업 비중에서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및 OECD 평균치는 2008년도 자료임.
자료 : OECD, *OECD Factbook*, 각 연도.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keum@kli.re.kr).

회가 확대되고, 이에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기회를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출하였을 가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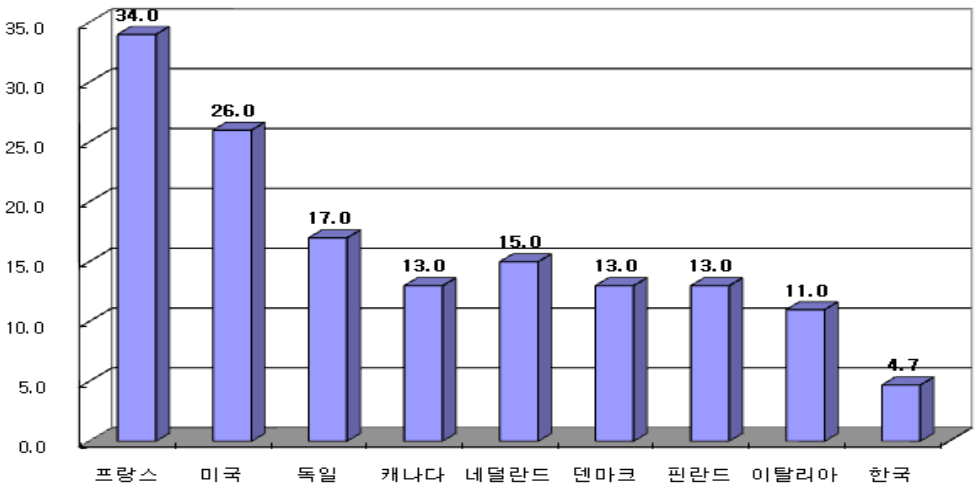
둘째는 조세시스템의 미비이다.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보다 소득파악이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실질조세부담률이 임금근로자보다 낮았다면 취업자는 자영업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으로 자영업 부문의 낮은 조세부담률은 자영업 비중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는 한국의 기업구조로 인한 것이다.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 [그림 2]처럼 한국의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4.7명에 불과하며, 이는 미국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값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정규직에 취업하지 못하였을 때,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부족하고, 그 결과 영세중소기업 취직보다 자기 사업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이다.

넷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에서 이직하였을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취업하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일자리 취업보다 자영업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배경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국가의 국민들과 비교하여 한국인들이 독립심이 강하고 진취적이며, 성취욕이 강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다.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영세한 저소득층이며, 근로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영업자 사이의 소득불평등도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며, 이러한 소득격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도·소매판매 및 음식·숙박업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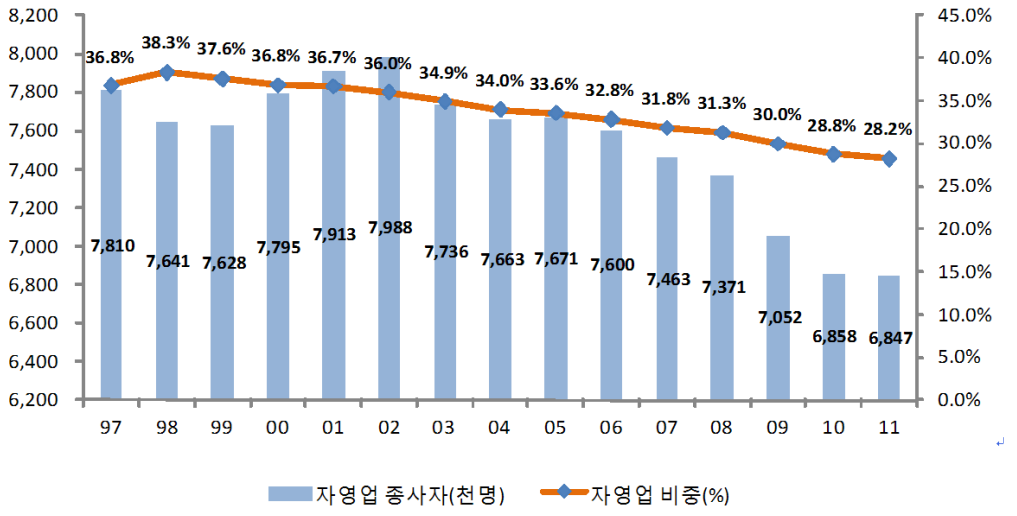
〔그림 2〕 기업의 평균 근로자 수



자영업 종사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시작한 이들이 많으며,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수출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내수경기에 주로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영난에 허덕이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더구나 경제구조의 변화는 자영업 종사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도·소매판매업이나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전문화 바람이 불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영세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도시 빈민계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서비스업 내에서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자영업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림 3]과 같이 1998년의 38.3%에서 2011년 28.2%로 크게 하락하였고, 자영업 종사자도 2002년의 7,988천 명에서 2011년 6,847천 명으로 1백만 명 이상이나 줄어들었다.[1)]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사회경제적 중요성에 비해 아쉽게도 정부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대란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대상은 임금근로자와 실업자였으며, 자영업자의 고용 및 소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2005년 5월 31일의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위시하여 여러

〔그림 3〕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비중(1997~2011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자영업 비중의 감소는 한국만이 아니라 OECD에서도 발견된다. 자영업 비중의 OECD 평균은 1996년의 19.2%에서 2001년 17.5%, 2006년 16.0%, 2008년 15.8%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가입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최근 가입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낮고 자영업 비중이 높은데, 이러한 신규가입국의 자영업 비중 증가효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차례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그 성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비록 지난해 8월부터 자영업 종사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와 더불어 노동시장 상황에서 바람직한 현상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상당 기간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 및 빈곤문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Ⅱ. 자영업 종사자의 특성과 변화

1. 자영업 종사자의 성별 추이

성별로 농림어업을 제외한 분야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이 남성은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1997년의 28.7%에서 2011년에는 25.6%로 약간 하락하였지만 여성은 그 비중이 32.0%에서 22.1%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남녀 모두 외환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표 1〉 남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 농림어업 제외

(단위 : %, 천 명)

	자영업 종사자			임금근로자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		상용	임시	일용	
1997	28.7	27.8	0.9	71.3	46.3	16.2	8.9	11,311
1998	29.5	28.5	1.0	70.5	45.9	16.6	8.0	10,605
1999	29.6	28.4	1.2	70.4	42.5	18.1	9.9	10,733
2000	29.6	28.5	1.2	70.4	41.9	18.6	9.8	11,217
2001	30.3	29.0	1.3	69.7	42.3	18.4	9.0	11,449
2002	30.3	29.1	1.2	69.7	41.2	18.4	10.1	11,859
2003	30.2	29.3	1.0	69.8	42.9	18.0	8.9	12,004
2004	29.7	28.8	1.0	70.3	43.5	17.9	8.8	12,235
2005	29.3	28.4	1.0	70.7	44.2	17.5	9.0	12,365
2006	28.6	27.7	0.9	71.4	44.6	17.7	9.0	12,498
2007	27.9	27.0	0.9	72.1	45.6	17.4	9.1	12,693
2008	27.5	26.5	1.0	72.5	47.2	16.6	8.7	12,793
2009	26.5	25.5	1.0	73.5	49.3	16.2	8.0	12,838
2010	25.8	24.8	1.0	74.2	51.0	15.9	7.3	13,012
2011	25.6	24.6	1.0	74.4	51.9	15.5	6.9	13,29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 여성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 농림어업 제외

(단위 : %, 천 명)

	자영업 종사자			임금근로자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		상용	임시	일용	
1997	32.0	18.6	13.4	68.0	26.5	31.0	10.5	7,618
1998	32.9	18.2	14.7	67.1	23.7	32.4	11.0	6,936
1999	32.2	18.5	13.7	67.8	21.5	31.4	14.9	7,256
2000	31.3	17.9	13.3	68.7	21.8	32.3	14.6	7,696
2001	30.9	18.2	12.7	69.1	23.3	32.4	13.5	7,975
2002	30.0	18.0	12.1	70.0	23.9	32.5	13.6	8,241
2003	28.3	16.5	11.9	71.7	25.7	34.5	11.5	8,185
2004	27.9	17.4	10.6	72.1	26.9	33.7	11.5	8,498
2005	27.5	17.6	9.9	72.5	28.1	33.1	11.3	8,676
2006	27.1	17.6	9.5	72.9	29.5	32.7	10.7	8,869
2007	26.3	17.3	9.0	73.7	31.2	32.5	10.1	9,014
2008	25.6	16.8	8.8	74.4	32.4	32.2	9.8	9,092
2009	24.2	15.8	8.4	75.8	33.7	33.0	9.1	9,036
2010	22.7	15.0	7.7	77.3	37.0	32.1	8.2	9,230
2011	22.1	14.5	7.6	77.9	39.7	30.7	7.5	9,40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자영업자의 규모에 있어 남성은 외환위기 중인 1998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였다가 2004년 이후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편 여성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가 2007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신용대란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숫자의 측면에서도 여성은 2007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08년 이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1,365천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농림어업을 제외한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1997년 이후 남성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2>와 같이 1998년 14.7%였던 여성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2011년 7.6% 수준으로 낮아졌다. 절대숫자에 있어서도 동 기간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는 306천 명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한국의 자영업 노동시장은 ① 여성이 일자리 증가를 주도하였고, ② 가족형 자영업의 몰락이 현저하며, ③ 여성의 독립적 경제활동이 증가한 특징들을 보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④ 여성 자영업자의 위축이 특징적 사실이다.

2.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은 <표 3>과 같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저학력자의 비중이 높다. 자세히는 2011년 기준 농림어업을 제외한 분야의 자영업 종사자 중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21.5%로 임금근로자의 31.3%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자영업자의 평균연령이 임금근로자보다 많고, 그동안 고학력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또한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보다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가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은 것도 이에 기여를 하고 있다.[2)]

이 외에도 <표 3>을 통해 자영업자의 학력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전문대 졸업생들은 자영업자보다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영업자 중 종업원 유무에 따라 학력차이가 커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의 학력수준이 상

〈표 3〉 자영업 종사자의 성별 · 학력별 분포(2011년) : 농림어업 제외

(단위 : %)

		자영업 종사자				임금근로자				전체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초졸 이하	9.6	2.9	12.0	12.4	6.7	2.9	10.1	20.5	7.4
	중졸	13.3	7.4	15.2	16.0	8.0	4.4	11.9	19.7	9.3
	고졸	47.2	44.2	47.6	51.2	39.1	32.3	50.0	50.8	41.1
	전문대 졸	8.4	10.9	7.8	6.5	15.0	18.2	11.5	4.5	13.4
	대졸 이상	21.5	34.6	17.6	13.9	31.3	42.2	16.6	4.5	28.9
남성	초졸 이하	6.4	2.0	8.6	8.6	4.6	2.1	7.4	16.9	5.0
	중졸	11.9	6.7	14.9	7.7	6.9	3.9	10.8	21.2	8.2
	고졸	49.5	44.0	52.3	52.7	38.5	32.3	52.9	51.7	41.3
	전문대졸	8.9	10.9	7.8	10.0	14.0	16.0	11.4	4.8	12.7
	대졸 이상	23.3	36.5	16.4	21.1	36.1	45.7	17.6	5.5	32.8
여성	초졸 이하	14.9	6.2	18.8	13.1	9.4	4.4	12.1	25.3	10.7
	중졸	15.6	10.0	15.9	17.5	9.5	5.5	12.7	17.7	10.8
	고졸	43.4	44.8	37.8	51.0	40.1	32.2	47.9	49.6	40.8
	전문대졸	7.4	10.8	7.5	5.9	16.2	22.2	11.5	4.1	14.3
	대졸 이상	18.7	28.2	19.9	12.6	24.8	35.8	15.8	3.3	23.4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2) 이의 근거에 대해서는 금재호 · 김기승 · 조동훈 · 조준모(2009)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 (종업원 있는+종업원 없는)자영업자의 학력별 취업자 비중의 변화 : 농림어업 제외

(단위 : %)

	학력				
	초졸 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1997	14.4	19.3	47.5	5.1	13.7
1998	13.0	16.5	48.4	4.3	17.7
1999	13.7	16.6	47.6	5.0	17.1
2000	13.3	16.5	47.8	5.4	17.0
2001	13.2	15.4	48.9	5.3	17.2
2002	12.5	14.8	49.5	5.5	17.7
2003	10.9	13.8	48.3	5.7	21.2
2004	11.1	14.2	47.8	6.0	20.9
2005	11.4	14.1	47.2	6.1	21.1
2006	11.2	13.7	46.9	6.7	21.4
2007	11.0	13.0	46.8	7.3	21.8
2008	10.9	12.7	45.6	8.1	22.7
2009	10.2	12.5	45.8	8.0	23.5
2010	9.4	12.7	46.1	8.3	23.5
2011	9.1	12.8	46.5	8.7	22.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대적으로 높다. 이는 고학력일수록 사업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같은 4년제 대학졸업자라도 남성은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은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3]

자영업 종사자의 학력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면 <표 4>처럼[4] 1997년 이후 중졸 이하 저학력자의 숫자와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고졸 이상 학력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취업자의 전반적인 고학력화와 더불어 저학력 고령자의 자영업 퇴출에 기인한다. 즉 자영업의 경영난은 저학력, 고연령 및 여성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

취업자 규모에 있어서도 1997~2011년간 중졸 이하의 자영업자는 34.0%가 줄어든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의 자영업자는 69.6%나 늘어났다. 이러한 고학력화 및 저학력 자영업자의 퇴출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고학력 자영업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자영업의 선택이 자신의 소득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자발적 선택이었을

3) 구체적으로 2011년 4년제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영업 종사자 중 남성은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가 50.2%,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45.8%인 반면, 여성은 각각 23.1%와 53.2%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남녀 각각 4.1%와 23.7%였다.

4) <표 4>는 자영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별 분포의 추이로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되어 있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중졸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의 45.4%에서 2011년 28.4%로 줄어든 반면, 4년제 대졸 이상은 같은 기간 4.4%에서 13.9%로 크게 높아졌다.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임금근로자로 창업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쌓고 창업에 필요한 자산을 축적한 뒤 신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자기사업을 시작한 근로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5)]

3. 자영업 종사자의 연령 구성

자영업 종사자의 연령대별 분석에서도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임금근로자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다. 2011년의 경우 농림어업을 제외한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이 40.8세인 데 비해 자영업 종사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48.1세로 나타났다.[6)] 그리고 인구고령화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2030세대는 <표 5>와 같이 자영업자의 비중만이 아니라 절대숫자에 있어서도 1997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즉 2030세대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보다 임금부문에 취업을 할 가능성이 줄곧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하였다. [그림 5]에서 자영업자 중 20대의 비중은 1997년의 9.2%에서 2011년 3.9%로 급락하였으며, 30대도 34.4%에서 16.8%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 1997년에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2030세대였지만 지금은 2명 정도에 불과하다.

셋째, 40대도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2030세대와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어 왔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취업자 규모는 2004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고 있다.[7)]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 자영업자 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그림 5]와 같이 2003년까지는 상승하였다가 하락하는 역U자를 보인다. 2011년의 경우 자영업자 중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2.6%로 1997년의 수준이다.

넷째, 50대 이상은 <표 5>와 같이 1997년 이래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이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양측 모두에서 발견된다. 이로 인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50대 이상이 점유하는 비중도 [그림 5]처럼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현재에도 자영업자 100명 중 46명이 50대 이상이다. 그러나 해당 연령대의 취업자에서

---

5) 이러한 점은 금재호・조준모(2000), 금재호 외(2003) 등의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분석결과는 자영업자가 매우 다양한 성격을 지니며, 한편에는 고도의 능력과 자질을 지닌 자발적 자영업자인 것에 비해, 다른 한편에는 능력이 부족하여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서로 다른 두 집단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자영업 종사자 내에서도 평균연령의 차이가 있다.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가 46.3세인 반면,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는 49.3세로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의 연령이 무려 3세나 젊다. 한편 무급가족종사자는 평균 46.7세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임금근로자도 상용직 평균 39.5세, 임시직 41.8세, 일용직 45.4세로 나이가 많을수록 종사상의 지위도 나쁠 가능성이 높다.

7) 세부적으로 자영업자는 2005년에 정점을 기록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03년에 정점을 기록하였다.

자영업자가 점유하는 비중은 [그림 4]와 같이 역U자형을 나타낸다. 즉 50대는 2005년을 정점으로, 60대 이상은 200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 5〉 연령대별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와 취업자 중 비중의 변화 : 농림어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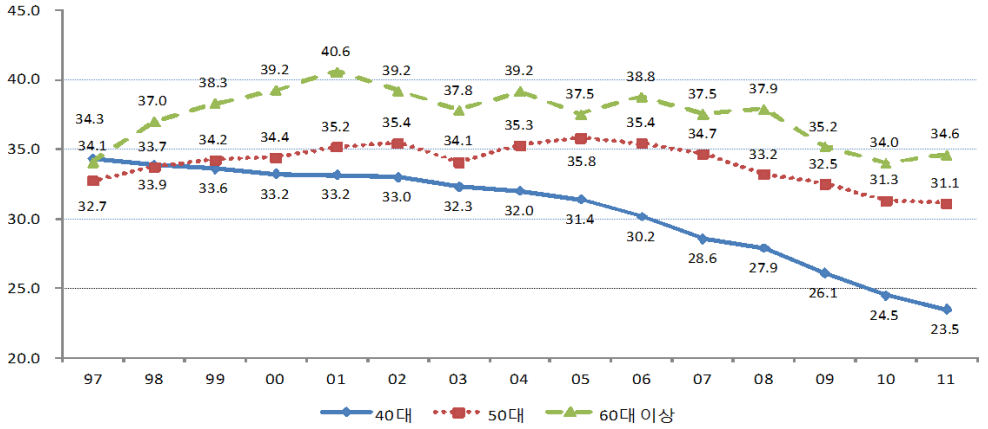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자영업자	1997	420(8.6)	1,570(25.6)	1,470(34.3)	762(32.7)	321(34.1)	4,562(24.1)
	1998	377(8.7)	1,428(24.9)	1,423(33.9)	725(33.7)	309(37.0)	4,279(24.4)
	1999	354(8.4)	1,402(24.3)	1,503(33.6)	767(34.2)	352(38.3)	4,393(24.4)
	2000	340(7.7)	1,410(23.8)	1,618(33.2)	809(34.4)	384(39.2)	4,573(24.2)
	2001	317(7.2)	1,432(23.9)	1,718(33.2)	857(35.2)	433(40.6)	4,772(24.6)
	2002	316(7.1)	1,407(23.2)	1,810(33.0)	925(35.4)	465(39.2)	4,937(24.6)
	2003	305(7.1)	1,331(22.0)	1,841(32.3)	927(34.1)	439(37.8)	4,860(24.1)
	2004	260(6.1)	1,295(21.3)	1,887(32.0)	1,031(35.3)	510(39.2)	4,994(24.1)
	2005	233(5.5)	1,211(20.0)	1,891(31.4)	1,138(35.8)	552(37.5)	5,038(23.9)
	2006	220(5.5)	1,153(19.0)	1,849(30.2)	1,212(35.4)	586(38.9)	5,028(23.5)
	2007	209(5.3)	1,086(18.3)	1,780(28.6)	1,279(34.7)	621(37.5)	4,986(23.0)
	2008	225(5.8)	994(16.8)	1,759(27.9)	1,293(33.2)	640(37.9)	4,921(22.5)
	2009	200(5.3)	887(15.4)	1,644(26.1)	1,330(32.5)	626(35.2)	4,697(21.5)
	2010	186(5.1)	862(15.0)	1,551(24.5)	1,375(31.3)	632(34.0)	4,616(20.8)
	2011	182(5.0)	778(13.6)	1,512(23.5)	1,462(31.1)	693(34.6)	4,636(20.4)

		연령대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무급가족종사자	1997	162(3.3)	431(7.0)	333(7.8)	136(5.1)	48(5.1)	1,119(5.9)
	1998	169(3.9)	393(6.9)	361(8.6)	136(6.2)	52(6.2)	1,123(6.4)
	1999	156(3.7)	379(6.5)	371(8.3)	142(6.0)	55(6.0)	1,118(6.2)
	2000	156(3.5)	383(6.5)	405(8.3)	146(5.6)	55(5.6)	1,158(6.1)
	2001	143(3.3)	365(6.1)	413(8.0)	154(6.5)	69(6.5)	1,157(6.0)
	2002	122(2.8)	346(5.7)	410(7.5)	168(6.3)	75(6.3)	1,133(5.6)
	2003	109(2.5)	323(5.3)	425(7.5)	158(5.6)	64(5.6)	1,089(5.4)
	2004	104(2.4)	282(4.6)	388(6.6)	163(5.4)	70(5.4)	1,016(4.9)
	2005	100(2.4)	251(4.2)	363(6.0)	183(5.2)	76(5.2)	980(4.7)
	2006	86(2.1)	224(3.7)	359(5.9)	195(5.5)	83(5.5)	953(4.5)
	2007	72(1.8)	191(3.2)	346(5.5)	218(5.4)	90(5.4)	924(4.3)
	2008	68(1.8)	182(3.1)	344(5.5)	236(6.1)	91(5.4)	926(4.2)
	2009	69(1.8)	154(2.7)	325(5.2)	241(5.9)	89(5.0)	884(4.0)
	2010	66(1.8)	139(2.4)	303(4.8)	247(5.6)	90(4.8)	848(3.8)
	2011	63(1.8)	134(2.4)	283(4.4)	259(5.5)	97(4.8)	84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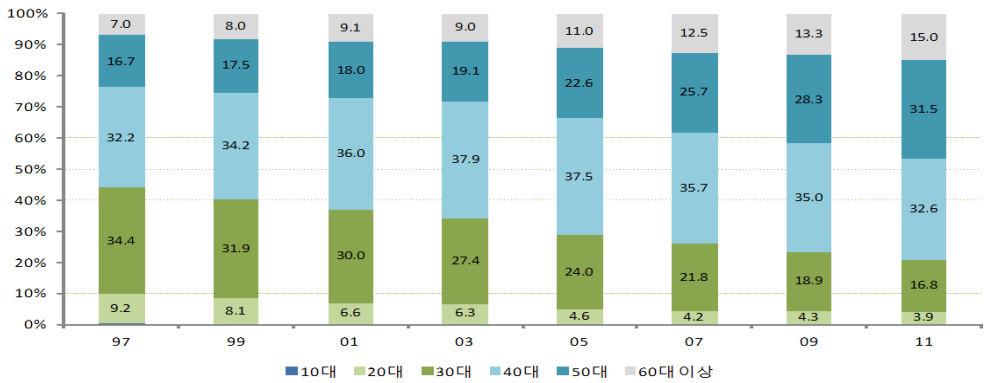
주 : ( ) 값은 해당되는 연령대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4〕 연령대별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1997~2011년) : 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5〕 자영업자의 연령대별 구성비의 변화 : 농림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4. 자영업 종사자와 산업

2011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도매 및 소매업이 1,536천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농림어업이 따르고 있다. 농림어업을 제외하였을 경우 자영업 종사자의 절반이 넘는 53.2%가 도소매, 음식숙박, 그리고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조업(10.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0.1%)에도 자영업 종사자의 10% 이상이 취업하고 있다.

업종별 취업자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농림어업이 88.8%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운수업(46.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43.8%), 도소매(42.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41.0%), 음식숙박업(40.9%) 등이 따르고 있다.

〈표 6〉 자영업 종사자의 산업별 분포(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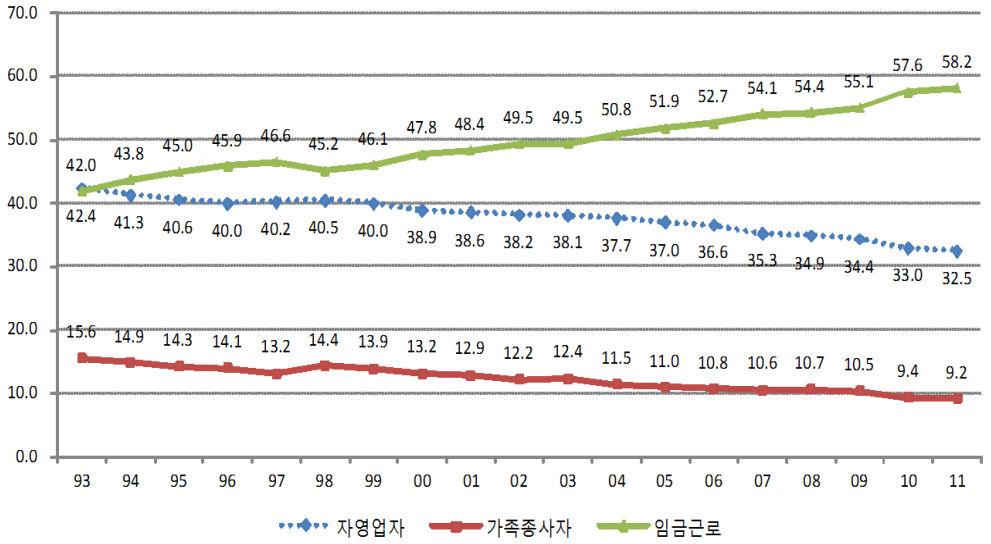
	자영업 숫자(천 명)			해당 산업 취업자 중 비중(%)		
	자영업자	가족종사	자영업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	자영업 전체
농림어업	958.1	410.3	1,368.3	62.1	26.6	88.8
광업	1.2	0.2	1.4	7.3	1.1	8.4
제조업	448.4	133.6	582.0	11.0	3.3	14.2
전기, 가스, 수도	0.7	0.0	0.7	0.9	0.0	0.9
하수·폐기물, 환경정화	5.1	0.2	5.2	7.2	0.3	7.4
건설업	377.6	25.4	402.9	21.6	1.5	23.0
도매 및 소매업	1,240.1	295.9	1,535.9	34.1	8.1	42.2
자동차 및 부품 판매	52.1	7.2	59.3	32.7	4.5	37.3
도매 및 상품 중개업	391.3	81.5	472.8	28.6	6.0	34.5
소매업	796.7	207.1	1,003.8	37.8	9.8	47.6
운수업	606.9	13.9	620.9	45.6	1.1	46.6
육상운송 및 파이프운송	588.3	9.9	598.2	54.6	0.9	55.5
수상 운송업	0.2	0.1	0.3	0.6	0.4	1.0
항공 운송업	18.5	3.9	22.4	0.0	0.0	0.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	16.7	3.9	20.5	9.2	1.9	11.1
숙박 및 음식점업	546.7	210.7	757.4	29.5	11.4	40.9
숙박업	16.7	3.9	20.5	14.4	3.4	17.8
음식점 및 주점업	530.1	206.8	736.9	30.5	11.9	42.4
출판, 영상, 방송 및 정보통신	48.2	4.8	53.0	8.4	0.8	9.2
출판업	25.8	2.5	28.3	9.3	0.9	10.2
영상, 오디오	15.0	0.0	15.0	28.8	0.0	28.8
방송업	1.6	0.0	1.6	3.9	0.0	3.9
통신업	3.1	2.1	5.2	1.9	1.3	3.2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2.7	0.2	2.9	7.0	0.5	7.5
정보서비스업	5.9	0.3	6.2	1.6	0.1	1.6
금융 및 보험업	43.5	3.4	46.9	4.5	0.4	4.8
금융업	6.7	1.0	7.7	2.0	0.3	2.3
보험 및 연금업	17.5	1.9	19.3	12.7	1.3	14.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	13.4	0.4	13.8	10.4	0.3	1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5.3	18.5	173.8	32.0	3.8	35.8
부동산업	140.1	17.6	157.7	32.2	4.0	36.2
임대업	15.2	0.9	16.1	30.1	1.9	32.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110.9	11.1	122.0	11.5	1.2	12.7
연구 개발	1.6	0.0	1.6	1.3	0.0	1.3
전문서비스업	43.3	2.7	46.0	9.1	0.6	9.7
건축 등 과학기술서비스	22.1	0.4	22.5	9.1	0.2	9.3
기타 전문·과학·기술서비스	43.9	8.0	51.8	38.2	6.9	45.2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40.9	4.1	45.0	3.8	0.4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11.4	1.7	13.1	6.5	1.0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29.5	2.3	31.8	3.2	0.3	3.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0.0	0.0	0.0	0.0	0.0	0.0
교육서비스	304.3	22.0	326.4	18.1	1.3	19.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70.2	8.4	78.6	5.4	0.6	6.0
보건업	39.8	4.4	44.2	5.6	0.6	6.3
사회복지서비스업	30.4	3.9	34.4	5.0	0.7	5.7

〈표 6〉의 계속

산업	자영업 숫자(천 명)			해당 산업 취업자 중 비중(%)		
	자영업자	가족종사	자영업 전체	자영업자	가족종사	자영업 전체
예술, 스포츠 및 여가	148.0	23.1	171.1	35.5	5.5	41.0
창작, 예술 및 여가서비스	35.0	0.5	35.5	30.5	0.4	30.9
스포츠 및 오락 서비스	112.9	22.6	135.5	37.4	7.5	44.9
협회·단체, 기타 개인서비스	484.5	67.6	552.1	38.4	5.5	43.8
협회 및 단체	2.9	0.5	3.3	1.1	0.2	1.3
수리업	154.3	26.5	180.8	38.4	6.6	45.0
기타 개인서비스업	327.3	40.7	367.9	54.2	6.7	60.9
가구 내 고용활동 및 기타	3.1	0.5	3.6	2.1	0.3	2.4
가구 내 고용활동	3.1	0.5	3.6	2.1	0.3	2.4
여타 자가소비 생산 활동	0.0	0.0	0.0	0.0	0.0	0.0
국제 및 외국기관	0.0	0.0	0.0	0.0	0.0	0.0
전 체	5,593.7	1,253.6	6,847.3	23.1	5.2	28.2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자영업 종사자 비중 추이[1)]



주 : 1) 2008년까지는 제8차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고, 2009년 이후에는 제9차 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계열적 불일치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시계열적으로 보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2005년 이후에야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특히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감소가 [그림 6]처럼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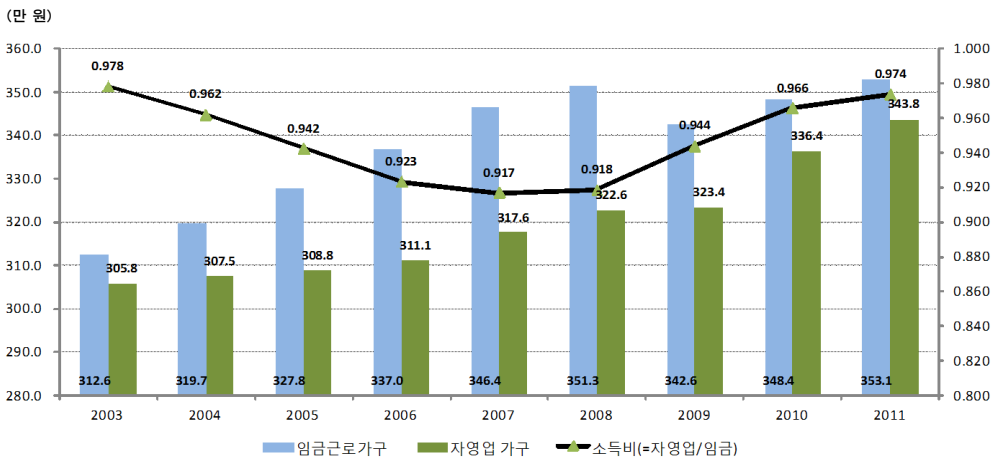
영세한 상황이다. 대형화와 전문화, 그리고 산업구조 조정의 결과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생계형 또는 가족형 자영업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급격히 상실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취업자의 임금근로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종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은 2011년에도 41.7%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Ⅲ. 자영업 가구의 소득과 빈곤

1. 자영업 가구의 소득

자영업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이다. [그림 7]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의 추이를 보여준다.[8] 실질가처분소득은 명목가처분소득에 2010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2008년까지는 가구주에 대한 종사상 지위만 있어,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를 구분하고 있다.

〔그림 7〕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추이 : 2인 이상 전국 가구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8) 통계청의 『가계조사』에서는 2006년 이후에야 1인 가구도 포함시켰다.

[그림 7]에서 자영업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003년의 305.8만 원에서 2011년 343.8만 원으로 10년 동안 12.4%가 증가한 반면, 임금근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13.0%가 증가하였다.[9] 특히 자영업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2003~2007년 사이 소폭의 상승에 그친 반면 임금근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 사이의 소득비율(=자영업 가구/임금근로 가구)이 악화되었다. 비록 2008년 이후 자영업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빠르게 상승하여 소득비율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임금근로 가구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자영업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가구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는 <표 7>에 있다. <표 7>에서 보면, 가구주의 성이 여성일 때,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의 저학력일 경우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이 하락하거나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 가구주의 경우 실질가처분소득은 2003년의 265.1만 원에서 2011년 270.2만 원으로 미미한 증가에 그쳤고, 초졸 이하 저학력 가구도 같은 기간 241.3만 원에서 235.8만 원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는 60세 이상에서 실질가처분소득이 2009년까지 하락 및 정체이다가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 가구 내에서도 여성, 고령자, 저학력자 등의 경영난이 보다 심각함을 보여주며, 이들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7〉 자영업 가구주의 특성과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 : 2인 이상 전국 가구

(단위 : 만 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성별	남성	310.8	312.9	314.7	320.0	326.1	327.0	327.6	342.7	353.4
	여성	265.1	268.5	271.4	263.3	273.4	294.3	294.6	293.2	270.2
연령	20~29세	254.4	243.9	304.0	251.2	279.7	275.2	263.7	326.0	255.2
	30~39세	290.8	300.6	308.9	312.2	320.2	316.8	314.0	320.7	330.4
	40~49세	318.9	318.9	326.1	331.3	324.9	339.6	349.4	358.2	367.5
	50~59세	320.3	314.6	314.9	321.9	345.9	341.2	339.6	354.8	353.3
	60세 이상	260.1	270.6	233.5	225.8	232.7	246.6	242.1	271.8	293.3
학력	초졸 이하	241.3	253.9	225.5	216.1	230.7	241.0	238.5	235.9	235.8
	중졸	268.9	268.6	269.4	267.5	272.2	267.4	282.9	301.8	322.0
	고졸	295.4	299.0	295.8	304.5	315.0	310.4	314.2	339.7	349.5
	전문대졸	332.6	307.1	335.1	349.2	385.4	368.6	346.2	334.5	326.8
	대졸 이상	375.9	385.2	404.4	397.7	377.1	404.0	400.7	402.4	406.8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9) 2009년부터 가구원에 대해서도 종사상의 지위 정보가 있다. 이에 가구 내 취업자 모두가 임금근로인 경우는 임금근로 가구, 취업자 모두가 자영업인 경우는 자영업 가구,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 종사자가 혼재한 경우는 혼합가구로 구분하여 소득비율(=자영업 가구/임금근로 가구)을 계산하면 2009년 0.870, 2010년 0.895, 2011년 0.897로 자영업 가구와 임금근로 가구의 실질가처분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영업 가구의 빈곤

자영업 가구의 빈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2011년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상대빈곤율을 계산하였다. 빈곤의 기준소득으로 가처분소득을 사용하였으며,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원시자료의 기초분석 결과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빈곤율은 18.3%로 나타났으며, <표 8>과 같이 가구 내 취업자가 없는 무업 가구[10]의 빈곤 위험성이 61.7%로 가장 높고, 자영업 가구가 13.4%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성별로는 예상처럼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높고, 연령대로는 60세 이상,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는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의 측면에서도 이들 여성, 저학력, 고령자가 취약계층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빈곤 위험성이 달라지는지, 즉 자영업 가구의 빈곤 위험성이 높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로짓(logit)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 빈곤이면 '1', 빈곤이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질적 변수를 사용하고, 설명변수에는 가구주의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과 더불어 가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포함시켰다. 또한 가구의 자산규모를 반영하는 변수로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비지출의 로그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8〉 가구주의 특성과 상대빈곤율(2011년) : 1인 이상 전국 가구

(단위 : %)

		가구의 특성				
		임금 가구	자영업 가구	혼합 가구	무업 가구	모든 가구
성별	남성	5.0	9.2	1.9	61.6	11.2
	여성	20.9	29.1	10.6	61.8	36.4
연령	20~29세	4.4	0.0	0.0	63.4	14.2
	30~39세	3.7	11.2	5.0	33.5	6.9
	40~49세	5.2	5.1	1.4	33.8	6.7
	50~59세	7.6	12.9	1.4	56.2	11.2
	60세 이상	28.0	30.0	6.6	70.8	46.6
학력	초졸 이하	33.2	46.9	13.8	81.2	55.8
	중졸	16.5	12.1	2.5	68.8	25.3
	고졸	7.4	9.3	1.9	46.3	12.7
	전문대졸	4.8	9.1	3.3	16.8	5.9
	대졸 이상	1.8	3.9	0.0	38.2	4.9
전체		8.8	13.4	2.7	61.7	18.3

자료 : 통계청(2011), 『가계조사』.

10) 가구 내 모든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가 '7. 기타'인 경우도 이들이 임금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 종사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편의상 무업 가구에 포함시켰다.

추정결과는 <표 9>에 있으며, 무업 및 기타 가구를 기준으로 자영업 가구의 빈곤 위험성이 임금 가구나 혼합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초분석의 결과와 같이 가구주가 여성이고 나이가 많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이 있고 소비지출이 높을수록 빈곤위험성이 낮으며, 거주 지역에 있어서도 군부 지역보다 시부에 거주할 경우 빈곤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영업 가구의 상대빈곤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이 2009년 이후 빈곤상태에 처한 자영업 가구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11] 특히 임금근로 가구와의 격차가 2009년 이후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상대빈곤율의 하락이 정부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영업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다른 가설의 하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취약한 영세자영업이 대거 폐업, 도태되었고 그 결과 시장경쟁력이 있는 자영업만 살아남았을 가능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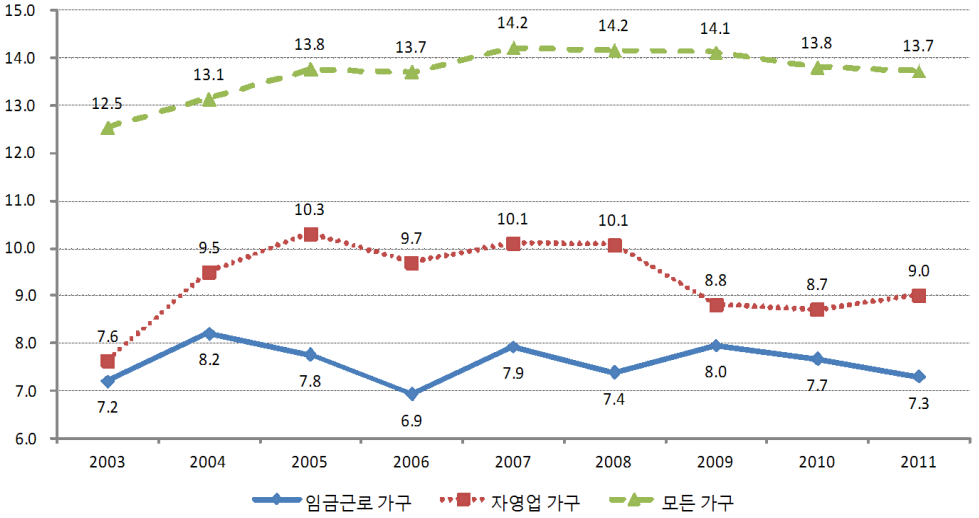
〈표 9〉 가구 특성과 상대빈곤 여부의 로짓(logit) 추정결과(2011년) : 1인 이상 전국 가구

설명변수	추정치	z	P>|z|
가구주 성별(0 : 남성, 1 : 여성)	0.04743	23.59	0.000
가구주 연령(세)	-0.00598	-12.54	0.000
가구주 연령의 제곱	0.00015	34.44	0.000
가구주 교육수준(초졸 이하 기준)			
중졸	-0.42349	-146.19	0.000
고졸	-0.44788	-165.88	0.000
전문대졸	-0.62013	-130.88	0.000
4년제 대졸 이상	-0.94465	-253.77	0.000
가구의 경제활동(무업 및 기타 가구 기준)			
임금 가구	-1.86313	-844.49	0.000
자영업 가구	-1.40385	-472.55	0.000
혼합 가구(임금+자영업)	-2.36695	-460.89	0.000
주택 소유 여부(0 : 있음 1 : 없음)	0.31950	156.48	0.000
소비지출의 로그 값	-2.18345	1103.91	0.000
거주 지역(0 : 군부, 1 : 시부)	-0.00452	-1.76	0.078
상수항	30.64080	1033.08	0.000
Pseudo R-squared	0.4715		
Chi-square 값	7265713.00		

자료 : 통계청(2011), 『가계조사』.

11) 여기에서도 자료의 한계로 인해 가구주가 자영업에 종사하면 자영업 가구, 임금근로이면 임금근로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8〕 가구의 경제활동과 상대빈곤율의 추이 : 2인 이상 전국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통계청, 『가계조사』, 각 연도.

Ⅳ. 자영업의 정책과제

자영업자는 2002, 2003년을 기점으로 소득과 매출이 정체되어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영업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의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영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2009년 하반기 이후 폐업・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의 경영난은 2003년 신용위기 이후 불거졌으며, 이번의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영세자영업자의 퇴출 등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들어 자영업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급격한 자영업 감소에 대한 반작용과 더불어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기인하고 있으며 자영업의 경영난이 개선된 결과로 보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폐업・도산으로 퇴출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될 전망으로, 이들을 위한 자금지원 등 단기정책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신용보증, 대출확대와 같은 자금지원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500만에 가까우며 이들의 3/4 정도는 혼자서 일하는 자영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 범위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비교하

여 한국의 경우 약 100만~120만 정도 자영업이 과잉상태로 이들이 빈곤 또는 실업상태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영업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자금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찾아갈수록 컨설팅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대상별로 다원화된 맞춤형 지원>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종사자들을 모두 살리려는 정책보다는 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자영업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지원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의 선별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의 발걸음은 자영업의 경영상태 및 미래에 관한 심층적 컨설팅서비스이다. 구체적으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저학력·저기능·고연령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금지원 확대와 더불어 심층적 컨설팅서비스를 통해 미래의 사업방향을 제시해 주고,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 차원의 소득 및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반면 신성장서비스산업에 진출한 고학력·고기능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심층 컨설팅서비스나 소득지원보다 사업정보 제공, 규제완화, 직업훈련, 시장 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가 더 중요할 것이다.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 자영업 종사자의 공식화>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 속하고 있어 사업자 등록증이 없고, 이들의 매출과 소득, 근로여건, 일자리 이력(history) 등의 자료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을 위한 합리적·체계적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해 관련 규제의 적정화와 정보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 매출과 소득이 매우 낮더라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이를 보고(report)하도록 하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제도에 영세자영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확충하는 것도 영세자영업자를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영업 친화적 사회안전망 구축>

자영업 종사자의 대부분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제도의 유연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유예 또는 지원, 가입동기를 촉진시키는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으로 이들의 가입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과 관련하여 먼저 실업보험저축제도와 유사한 개인별 보험계정(individual insuracne account)을 도입하고 일반보장성보험처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용보험기금 내에 특별계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또는 지자체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 중 일부를 자영업 지원의 제원으로 전환하며, 임금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는 별도의 특별계정 도입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2009),『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Ⅰ』,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조준모(2000),「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노동경제논집』23권 특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_____,『가계조사』, 각 연도.

OECD, *OECD Factbook*, 각 연도.